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¹⁾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성과공유정보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개인적 삶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아동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중심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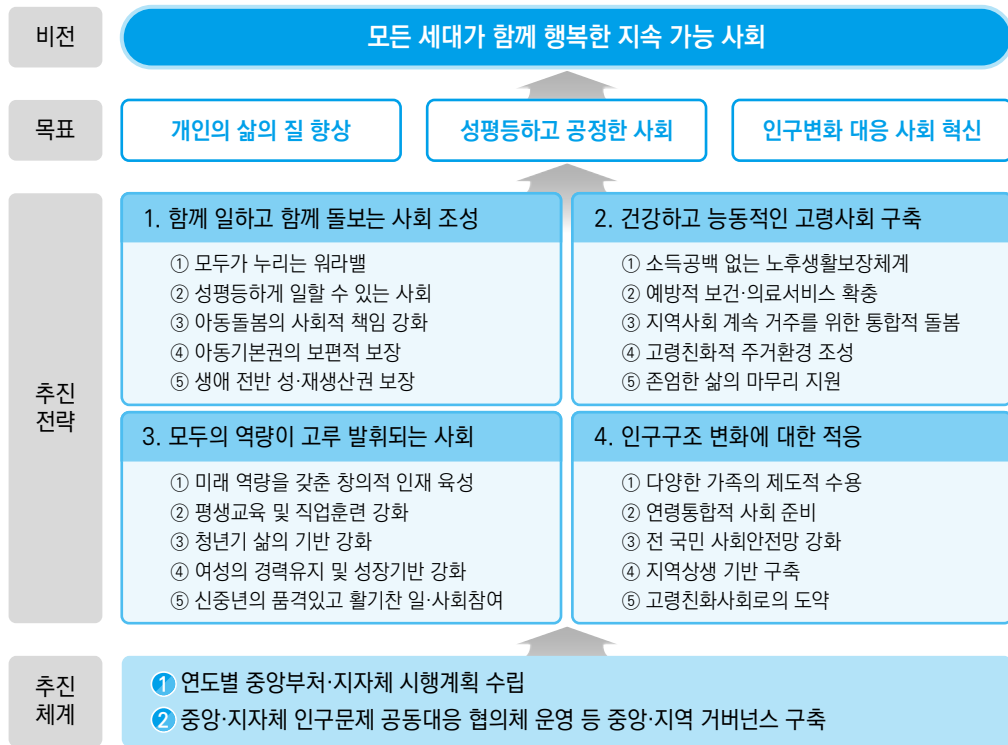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요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초저출산, 고령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2020년은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특히 2020년 9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나타났다²⁾.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당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아동과 관련된 내용은 추진전략 1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 포함되어 있다.

1) 본고는 관계부처합동(2020.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요약함.

2) 통계청(2020. 9). 2020년 9월 인구동향 p. 3.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38.

[그림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아동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이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 사회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배경과 세부실천계획을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부의 변화된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측면

가. 추진배경 및 방향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³⁾을 비준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아동정책은 가족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어 아동을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이 권리의 주체

3) 전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국제법으로 승인함. 2020년 8월 기준 전세계 196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91. 12. 20에 적용되었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4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초저출산 사회에서는 개인 1인의 역량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아동 기본권 보장이 주요영역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아동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당위성이 커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추진과제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아동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전인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출생 신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구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 주거, 보호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동일하게 행복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 추진과제

1)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다.

아동을 직접 수혜자로 인식하고, 출생만으로도 부여되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동수당의 제도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가구 유형에 맞추어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제도를 마련하고, 아동별 동등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동에게 주어지는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지원도 강화되었다.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표 1>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추진과제 주요 내용

세부추진과제	주요 내용	
영아기 집중투자	영아수당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세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수당으로 적정 비용·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 ‘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25년 월 50만원 목표 도입) 이용 범위 다양화: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직접돌봄 소요비용(현금성) 등으로 선택 가능
	첫 만남 꾸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부터 기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총 300만원으로 확대·개편(임신시 100만원, 아동 출생시 200만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60→100만원으로 인상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200만원 신규 지급
아동지원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목적, 해외사례 등을 고려, 사업성과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 확대 방안 마련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2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부처, 지자체 간 협의회 통해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가입 활성화 등 검토
아동이 있는 가정 주거지원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에 주거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 좋은 주택공급 신규 도입, 거주기간 확대, 넓은 평형 우선권 부여 등 주거비부담 완화: 구입, 전세자금 대출 한도 2천만원 상향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p. 79-82 내용 요약·발췌함.

2)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의 주요 내용은 <표2>에 정리되어 있다.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속한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도록 출생신고의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놀이권도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보고, 놀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실제로 아동이 누릴 수 있는 균등한 놀이공간 조성 방안도 포함되었다.

<표 2>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보장 추진과제 주요 내용

세부추진과제	주요 내용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출생신고 개선 • 출생신고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신속한 사회적 지위 부여 및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재활지원 강화 • 공공어린이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예방·지원 강화 • 심리·정서 발달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진단 지원 • 심리·정서발달에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의 심리검사·놀이치료·심리치료 등의 지원 확대 •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선별검사 통해 정서, 행동문제 학생 성장기 학교 교육활동 지원
	전자미디어 과몰입 예방 • 영유아 전자미디어(스마트폰 등) 포괄적 예방대책* 마련 * 영유아기 전자미디어 과다노출 시 발생위험 권고 및 발달단계별 양육방법 지도, 부모-자녀 전자 미디어 활용법을 포함한 교육자료 등 제공 • 과몰입 청소년 대상 단계적·체계적 치유 지원
아동의 놀이권 보장	• 아동의 기본권리로 놀이권을 보장 • 사회적 책임을 강화,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지침 등) 마련 • 우수놀이모형 개발, 기존 낙후놀이터 개선 등 균등한 놀이공간 제공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p. 83-84 내용 요약·발췌함.

<표 3>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추진과제 주요 내용

세부추진과제	주요 내용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학대 예방 강화 • 학대 위험 발견된 아동의 가정방문 의무화 • 가정폭력 신고 및 아동학대 조사 자동 연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지자체 중심 아동학대 조사·대응책임 강화 • 지역 보호체계 강화: 지자체 정보 연계 및 보호체계 강화
	원가정 복귀 개선 • 아동학대로 원가족과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전한 복귀 지원: 부모교육 등 가족기능 회복 강화
아동보호 체계 공공성 강화	입양의 공적 책임 강화 • 입양절차 전반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한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
	가정형 보호 확대 • 집단적 아동보호시설 내 양육 축소,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 확대
	보호체계 내실화 • 전문가정위탁 제도 법적 정비, 지원 합리화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공공성 확보: 협동조합·법인화 추진
미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	• 아동의 법정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역할 강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위기청소년 맞춤형 청소년안전망(CYS-Net) 운영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강화: 아동정보를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강화: 학업 중단 이후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연계 및 상담·교육 지원 강화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p. 85-86 내용 요약·발췌함.

3)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의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출생한 아동·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위협이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관련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원가정으로 복귀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입양의 공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3. 맺음말

모든 아동은 한명 한명이 소중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처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아동을 양육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아동이 정책의 직접 수혜자이자 대상자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성장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정책 목표로 명시화된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강조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